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영조 새만금도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의 민간위원들과 조동용 전북도원이 '한수원 수상태양광사업 원점 재검토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수원 수상태양광사업 공고, 공정성 훼손 의혹”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들, “특정 업체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 진행 우려 소문·논란 부추겨”... “환경 오염 물질, 설비서 제외를” 주장도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들이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 훼손, 불공정 의혹! 한수원 수상태양광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간협의회는 “환경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FRP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한수원-(주)새만금솔라파워 300MW 수상태양광사업 공고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의 결정을 위반했기에 민간협의회는 한수원의 공고를 무효라는 결정을 지난해 12월 30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원들은 “통합법 수상태양광(9년제 운영중)에서 FRP 부식으로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 배출이 확인됐다”며 “우려가 아니라 현실에서

환경 피해를 낳고 있는 FRP나 우레탄 폼은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민간위원들은 민간협의회 결정 위반 사항이 또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공고문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10개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애초에 민간협의회가 제시한 100MW 분할발주가 불가할 경우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공고문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발주를 고수하며, 분할발주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다가, 의도

가 의심되는 제3자 계약자 분할발주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평가 방식을 담고 있다”면서 “특정 업체의 제품에 유리하게 쓰여진 기술규격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한수원의 사업 재공고는 불가피 하다”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며, 지역과의 상생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민간위원들은 “한수원-(주)새만금솔라파워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재입찰 공고안을 민간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명문화

민주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6일,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혐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된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

업장 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

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오늘 신년인사회 비대면 화상 회의로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일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정부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강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예정이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와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뉴시스

코스피 3000선 돌파... 민주 “이제 뭐라 하시겠나?”

“문 대통령의 주가 3000 시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주호영 겨냥 “대통령 비판 위해 개미 투자를 비정상적 주가 상승으로 곡해”

“민생 어려움 여전히 있으나 우리경제 미래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 인정 반증”



코스피가 전 거래일(2990.57)보다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개장하며 사상 처음 3000선을 넘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3,011.45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한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축과 함께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정조준한 비판이 나왔다.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 3000시대’ 언급에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이라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대표는 불과 한 달 전에 ‘코스피지수 3000 시대 열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었다”며 “이제 뭐라고 하시겠나”고 적었다. 윤 의원은 “주가지수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며 “제발 국민 의힘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힘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스피 3000선 돌파는 주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며 “당시 주 원내대표와 이해훈 전 국회의원은 오직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코스피 3000선 돌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동학 개미들의 상실한 투자 활동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곡해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님, 이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국 경제 희망의 불꽃을 제발 꺼뜨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주 원내대표는 “지금 주가 3000시대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코로나 불안이 없어지며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제상황

이 회복된다고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국민이 느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은 코스피 3000 돌파에 긍정적 의미도 실었다. 윤 의원은 “서민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경제의 탄탄함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미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시장에 대한 믿음과 투자자들의 노력이 모여 국내 경제의 밑거름을 다시 튼튼하게 한 것”이라며 “유례없는 증시 지수 상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다. 새롭게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시적 상향”

민주 이원택 의원, 소비촉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는 지난 4일, 오는 설명절에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피해 등 삼중고에 빠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돼 주요 판로를 상실했고, 지난 수확기에 장미와 태풍이 50일 이상 이어짐에 따라 작물 피해가 막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체 소비위축은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농어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할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기간 전년 대비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량이 47.6% 증가했다. 특히 금액대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인 과일 상품의 판매 증가율이 48.6%에 달해 축산물뿐 아니라 농가 전반에 그 효과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말,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한 정책을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높게 평가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업계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오늘 신년인사회 비대면 화상 회의로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일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정부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강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신년인사회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예정이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와대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뉴시스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